

여성

- 특집 • ① 보사부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
② 전국여성단체 지도자연수



1994·4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맛있는 빵·신라명과

신라명과는 1979년 Hotel Shilla의 제과 사업부로 시작하여 최고급 제품 생산을 기업 모토로 운영해온 제과·제빵 전문회사입니다. 1984년 보다 전문적인 제과·제빵 업체로 발돋움 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로 분리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최고의 제품"만을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90년도에 들어서는 제조 기술의 국제화를 위해 프랑스 최고급 식료품 회사인 HED IARD (에디알)사와 기술을 제휴하여 프랑스 본고장의 빵맛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라명과 제품과 만나보세요. 한차원 다른 빵의 세계를 경험하실수 있습니다.

신라명과 Family Brand



모방할 수 없는 품질

럭키 하이샤시

럭키가 하이샤시마크를 새깁니다. 직접확인하십시오.

럭키 하이샤시 마크는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럭키만의 약속입니다.

프라스틱 창호업체에서 최초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크를 새기고 있는 럭키가 설계에서부터 A/S까지 보증합니다. 조용한 환경과 아늑한 실내 분위기 뛰어난 패션 인테리어 창문 럭키 하이샤시- 가까운 하이샤시 대리점을 찾으세요.

보온, 방음, 하이패션 창문

럭키 하이샤시



●하이샤시는 럭키의
고유상표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주) 럭키 건축자재사업부 787-7616~7 건축자재전시장 522-9742~4 ■ 지방영업소 ● 인천 : 421-4085~6 ● 수원 : 39-9722~5
● 부산 : 818-4640 ● 창원 : 64-9911 ● 전주 : 758-3991~4 ● 울산 : 61-4965 ● 제주 : 42-6781 ● 대구 : 964-1054 ● 안동 : 858-7584~5 ● 포항 : 81-9688
● 대전 : 632-6610~2 ● 광주 : 52-2910~11 ● 전주 : 83-9070~6 ● 광주 : 367-0901~8 ● 순천 : 743-4430~2 ● 춘천 : 55-3281 ● 강릉영업소 : 646-0141~2

월간 여성

월간여성 4 월호 통권317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국제관계에서의 여협의 기능 / 최영희

특집 / 1보사부장관 초청 여성정책 간담회
2전국여성단체지도자 연수

- 6 **특집1**
"보사부 산하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 / 서상목
- 9 **특집2-주제강연 I**
정치관계법 개혁의 골격 및 주요내용과 그 역사적 의미 / 박상천
- 17 **특집2-주제강연 II**
여성정치 세력화를 위한 정치개혁법 활용방안 / 백영옥
- 21 **특집2-종합토론**
금년 여성계 중점사업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24 **소비자 정보**
상품권 제도
- 26 **특별기고/UNFPA 회의 참가기**
여성의 출산권리와 출산건강 확보가 회의의 초점 / 이정자
- 28 **매스컴 모니터 교육 참가기**
나를 위한 일, 매스컴 모니터 / 송계연
새로운 설렘 / 조혜형
- 30 **해외여성통신**
희망과 장애를 함께 안고 있는 각국의 여성 / 이영남
- 33 **여성학 지상강좌**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여성이 되는 의미 (VI) / 추예주
- 38 **신임위원회 위원 소개**
- 43 **여성계 동향 / 황금희**
- 48 **협의회 소식**
- 50 **우리들의 광장**
- 52 **알림**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안내

국제관계에서의 여협의 기능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 본회 국제관계위원장)



내적 가치의 발견과 확산, 외적 연대 강화를 통한 해결 전략은 모두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낳으며, 이 필요의 충족이 여협의 국제관계 기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여성단체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단체간의 우의와 협력을 다지며 이를 통한 힘으로 우리사회의 여성이 갖는 공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어 정부 및 대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여협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국제화, 세계화시대라는 현 시점에서 국내 단체들간의 친목과 교류 및 협의를 통해서만 하는 것보다 국제관계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면 우리의 여성문제가 더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우선, 상호 정부교류를 통하여 본 문제를 각 나라의 그 사회 문화 경제적 구조와 연결시켜 문제를 분석해 보므로써 여성 문제를 더욱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원적 구조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파악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타국의 idea와 전략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근원적으로 공통되는 문제는 국제간에 공동전략으로 힘과 목소리를 합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협의 국제관계 기능 활성화는 상호 정보의 교류, 각 나라와의 연대 강화를 위한 조직망 활용을 통해서 사회적, 국가적인 여성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을 얻어 사회적 지위향상, 여성 정치 참여 강화등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

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제간의 교류를 하다보면 우리나라 여성이 갖는 어떤 가치와 잠재력도 찾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잠재력의 타국 여성과의 비교는 우리의 고유한 힘의 근원이 되는 무엇인가의 가치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제 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각 나라간의 연대강화라는 외적 구조를 통해서 보다는 우리의 내적 가치를 발견하고 키우는 내적 힘을 찾아 여성의 지위 향상에 행동의 동인이 되는 우리의 의식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나아가 자아 가치감과 자아 존중의식 발전을 갖게 하여 모든 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할 것이다. 21세기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라 하는데 우리는 각국의 여성문제를 생기게 하는 발생기전, 해결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발생기전과 해결책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문화가 우리 여성에게 문제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해결의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은 각 나라의 여성 문제해결에 idea와 지혜를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일단 생기는 공통의 문제는 각 나라간의 연대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적 가치의 발견과 확산, 외적 연대 강화를 통한 해결 전략은 모두 국제 교류의 필요성을 낳으며, 이 필요의 충족이 여협의 국제관계 기능이 될 것이다.

특·집

①보사부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

②전국여성단체 지도자연수

다음은 본회가 지난 3월 29일 서상목 보사부장관을 초청해 가진 여성정책간담회 내용이다.

“보사부 산하 위원회 내 여성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

서상목 (보사부 장관)

〈기조연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첫번째 기회를 저에게 준 이연숙회장과 여협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모두 모인 여성계 지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보사부 업무는 무척 다양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 부족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삼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얼마전 한 외국의 시사잡지가 우리 문민정부의 1년 업적을 평가하면서 정치는 A학점, 경제는 B학점, 사회복지지는 C학점이라 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제가 맡고 있는 사회복지부문이 C학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까진 이쪽 분야에서 한 일이 없어서 평가를 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위주의 낙후된 보건행정에서 벗어나 보건산업의 수준을 높여 국민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하나의 커다란 틀이 없고 경제발전 우선정책에 밀려 복지수준이 뒤떨어진 실정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틀을

짜고 좀더 수준높은 복지정책을 펼 계획이다.

먼저 의료분야를 보면, 이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제2도약의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의료보장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여러가지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연구중이다. 수가제도도 개선하고 경직된 보험제도를 다양하게 확대 발전시키고 의료관리체계도 조합의 기본정신은 살리되 전산망으로 일원화하고 그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등을 연구중이다.

또 국민연금으로 적립된 것이 8조원정도이다. 이 기금의 3분의 1가량을 근로자복지(근로자주택), 노인복지(양로시설), 탁아사업등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한편 식품의 안전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식품행정을 보다 강화하겠다. 우선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의 위생국을 식품국으로 바꿔 형식뿐 아니라 내용도 보완하겠다.

얼마전 광천음료수, 생수 시판을 허용했는데, 그 조치는 원래 시판돼오던 것을 이제부터는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시설기준, 수질기준을 새로 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하수 무분별 개발을 지양키 위해 지하수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통과된 경우에만 생수 공장을 허용하겠다. 아울러

생수업체로부터 거둔 세금재원으로 수도물 수질개선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노인대책이 굉장히 취약하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노인병원·치매센터·양로시설등을 설립하고, 노부모를 모시는 전통미풍양속을 계승·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또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로서, 가족정책도 문제가정위주의 문제해결 처리보다는 예방적 측면에서 건전가정 육성정책수립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로 93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보사부에서는 그 시행에 필요한 하부법령을 제정 중에 있다. 특별히 우리부에서는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하게 됨으로 이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

이 외에도 영세민 가정·보육문제·의약품 문제 등 보사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고 또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보사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여성단체 여러분을 비롯한 전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로 여성관련 부문에 대해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질의 응답에서 대신하기로 하고 여기서 그만 줄이겠다.

〈질의 응답〉

• 주일억(국제존타한국연합회 회장): 의료보험에

대해 질문하겠다. 보험료를 현재 피보험자와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정부에서도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사회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특히 노인병문제가 심각한데, 노인병의 특징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10일만 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150일은 해당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몇세이상 노인들에게는 보험적용기간이 확대돼야 한다. 또 노인병 환자 수용시설도 많이 세워졌으면 한다.

▶서장관: 지역의료보험의 경우엔 정부가 43% 정도 지원하고 있다. 어느 정도 상향지원은 몰라도 현 상황에서 정부재정으로 크게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 210일 보험적용기간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을 하겠고, 노인병 전문센터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적극 투자하겠다.

•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4월 1일부터 성폭력 관련법이 시행되고 피해여성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준비하는 것을 보사부령으로 담게 되는데, 지난 3월 28일 경제기획원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서는 이것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보사부의 대책은?

▶서장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는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은 실무자선의 이야기지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성폭력 관련법은 당의 공약사항이었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 제정이므로, 그 예산 때문에 특별히 만든 법이 유명무실해져서는 안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 정영숙(한국피해여군회 회장): 보사부내 여성공무원 실태와 보사부 산하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서장관: 보사부의 전체 공무원 수는 현재 3,884명인데 이중 1,852명이 여성으로 47.7%를 점한다. 이는 엄청난 수이다. 그리고 5급이상 관리직 608명 중 여성이 84명으로 13.8%를 점해 다른 부처에 비하면 여성관리공무원이 많은 편이다. 특히 약사





직장보육시설 확충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500인으로 되어 있는데 300인으로 낮출 계획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란 용자자금을 이용해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토록 하겠다.

의사등 전문직에 여성이 많다. 그리고 위원회수는 36개, 위원수가 623명인데,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보면 당연직 위원 121명중 여성이 9명 7.4%, 위촉직 위원 502명중 71명 14.1%가 여성으로 전체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12.8%이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증원할때 충분히 배려해 개선 하겠다.

• 김영희(본회 근로여성위원) : 영유아보육법에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범위를 남녀 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용의는?

그리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태부족이고 기존의 사설시설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서장관 : 직장보육시설 확충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500인으로 되어 있는데 300인으로 낮출 계획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란 용자자금을 이용해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토록 하겠다. 그리고 국립정신병원이 있긴 하지만 부족한 실정이고 기존 사설시설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도움말이 필요하다.

• 이정자(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 보사부 산하 위원회의 위원들의 충원과정을 알고 싶다. 그리고 보육비 부담을 국가가 개인들과 공동 부담할 계획은 없는지, 또 현재 탁아 시간을 비롯한 탁아형태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사부 계획은?

▶서장관 : 위원 충원과정은 담당과장, 국장이 기안해 가져오면 장관이 결재하는 간단한 과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담당과장, 국장선에서 여성 인물의 적극적인 개발로 위원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보육비 부담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할 계획이다. 보육비 직접 공동부담은 곤란하지만 정부가 간접적인 지원 방안 즉 시설설치 자금 용자등은 앞으로 강구될 것이다. 또 시간면에서의 보육형태의 다양화는 심도있게 연구하겠다.

• 서은경(대항영양사회 회장) : 국민을 위한 보건 정책중 영양부문은 지금 불모지와 다름없다. 국민들의 영양·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는 바, 다각적인 영양정책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보사부가 94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입법화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영양부문이 극히 미진하므로 이에 대해 보완할 용의는?

▶서장관 : 21세기 보사정책이란 바로 예방의학적인 차원의 정책수립이므로 이제까지 미진했던 영양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 일환의 하나로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시안상 태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양부문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

▶ 특집/2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 - 주제강연 I

다음은 본회가 4월12,13일에 걸쳐 실시한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중 주제강연과 종합토론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

정관계법 개혁의 골격 및 주요내용과 그 역사적 의미

박상천 (민주당 비민주법률개혁특별위원회장)

가. 정관계법 개혁의 골격과 주요내용

1. 공직자윤리법(개정)

• 정치권(대통령, 국무의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원)의 재산등록과 공개 및 매년 변동사항 신고

2. 국가안전기획부법(개정)

• 수사권 축소
• 정보수집권에 해외경제정보, 국제범죄조직정보, 대테러정보 등 추가
• 보안감사권 폐지
• 직권남용죄 신설하여 적법절차 위반한 인권 유린 형사처벌
• 국회정보위원회의 안기부예산 실질감사와 안기부 직무감독
• 정치관계죄 신설하여 안기부의 정치관계 형사처벌

3. 통신비밀보호법(제정)

• 전화 등 전기통신의 도청과 우편검열에 영장주의 도입

• 도청내용 공개, 누설 등 형사처벌과 불법도청으로 얻은 자료의 증거 사용 금지

4. 정당법(개정)

• 정당설립에 필요한 법정지구당 수를 48개에서 24개로 완화
• 입당원서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초본 첨부규정 삭제하여 입당절차 완화
• 당비납부제도 정착을 위해 당헌으로 당비납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명, 권리행사 제한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함
• 창당방해 등의 죄를 신설하여 정당의 창당준비활동 또는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그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케 한 자를 처벌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정)

○. 한마디로, "말은 트고, 돈은 묶는 선거"를 규정

○. 말을 트도록 하는 규정

(1)선거운동 주체와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포괄적 금지규정 폐지하고, 개별금지조항 설정

• 이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법정선거운동원제도 폐지로,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유도)

• 다만,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근임직원, 농축수협과 농지개발조합, 의료보험조합 등의 상근임직원과 그 중앙회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새마을, 바살협, 자유총연맹의 상근임직원과 그 중앙회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관권선거 금지 위한 규정)

• 단체는 단체명의 또는 그 대표자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선거운동 사무처리와 야간연락 등을 위해 극소수의 유급선거사무원을 두도록 함.

(2)'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신설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연설원이 확장장치부착 자동차를 사용하여 도로변, 광장, 공터, 시장 또는 점포, 주민회관 기타 중앙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연설·대담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호별방문 제한에 대한 예외 인정(제106조)

(4)합동연설회 존치(제75조)

•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마다 2회, 다만 2개이상 구·시·군의 경우 구·시·군마다 1회
• 시장·군수·구청장선거와 광역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마다 2회

(5)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신설(제81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선거운동이 금지된 정부투자기관 등과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을 제외한 단체는 후보자나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 한함)를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담, 토론 개최비용을 후보자에 부담시킬 수 없고, 후보자와 그 가족 등 기부행위제한자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 제공할 수 없도록 함.

(6)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개선(제71조)

•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 각 5회 이내

• 전국구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후보자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 각 1회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 각 1회

• 비용: 후보자의 경우 기탁금 반환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연설원은 자체부담

(7)방송광고의 확대(제70조)

• 대통령선거: TV와 라디오 각 10회 이내

• 시·도지사선거: TV와 라디오 각 3회 이내

• 광고시간: 1회 1분 이내

• 후보자 부담

(8)후보자비방지의 완화(제251조)

•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비방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경쟁후보자의 정치적 공과 등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함(구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 돈을 묶는 규정

(1)선거비용의 총액제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 강화(제119조 내지 제136조)

• 선거비용의 지출제한: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대통령선거 193억원, 시·도지사 7억2천만원, 국회의원선거 5천7백만원, 시장·군수·구청장선거 5천6백만원, 시·도의원선거 1천8백만원, 시·군·구의원 선거 1천1백만원으로 하여 그 산출기준을 법정화 함.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년도부터 당해선거가 실시되는 전년도 소비지출률 변동율을 감안하여

당해선거에서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

• 선거비용의 수입범위: 선거비용의 수입은, 후보자의 자산(차입금 포함), 후원회의 기부금, 소속정당의 지원금에 한정됨.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절차: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로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그 지출은 각 회계책임자(그 서면위임을 받은 회계사무보조자 포함)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지출보고서: 회계 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예금통장 사본도 첨부),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사본과 선거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연대서명, 날인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공고와 열람 및 이의신청

•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의 열람, 관계인에 대한 조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허위보고 등 위법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 수사의뢰, 기타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2)당선무효 사유의 확대(세칭 '연좌제'의 확대)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 당선인이 당해선거에서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5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매수및 이해유도죄)내지 제234조(당선 무효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제263조)

• '연좌제'에 대한 면책규정: 선거사무장 등 타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규정은 그 선거범죄가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함(제265조 단서, 제263조 단서)

(3)금품선거를 막기 위한 정당활동의 제한

• 당원단합대회 등의 제한: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로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단합대회, 당원연수회를 금지.

• 당직자회의의 제한: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녀 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확대당직자회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신고한 후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제한(제142조 참조)

• 당원교육의 제한

• 당원 모집 등의 제한: 선거기간 중에는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음.

(4)후보자의 등록대상 재산신고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시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공직자 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의하여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자는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제49조 제4항)

• 후보자가 등록대상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재산공개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재산 공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제52조 제1항 제6호)

(5)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에 관한 규정들(제10조)

○. 기타 주요개헌사항



(가)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정당추천제 도입(제47조)

(나)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24조)

(다)선거기간을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17일, 지방의회의원선거 14일로 함(제33조)

(라)선거일을 법정화 함. 다만,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은 공고주의를 채택(제34조, 제35조)

(마)현수막의 수량을 축소조정하고, 대통령 선거에 한하여 표지판, 표찰, 수기 등을 허용함(제67조, 제68조)

(바)선거공영제를 확대함

• 절대적 공영비용: 선전벽보의 첨부·철거비용, 선거공보 발송비용, 소형인쇄물 발송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무·개표 참관인 수당 등

• 상대적 공영비용(기탁금 반환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공영제 혜택):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비용 등(선 자기부담,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전)

(사)선거범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선거범죄에 미수범을 두지 아니한 골격을 보완함(제230조)

(아)동시선거제도의 도입

(자)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6.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

○ '돈안드는 선거' '돈안드는 정치'의 실현과 궤를 함께 하여, 선거와 정당활동,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치비용을 합법적, 양성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함.

○ 주요내용

(1)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국회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구성을 허용함(제3조 제8호)

• 후원회의 회원수를 중앙당후원회는 1,000인에서 2,000인으로, 시·도지부 후원회는 300인에서 500인으로, 지구당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 등은 200인에서 300인으로 확대함(제5조 제4항)

• 후원회의 회원이 납입하는 후원금의 최소한도를 연간 1만원 이상으로 함(제6조의2 제5항)

• 지구당 등의 후원회는 모금한도액인 연간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제4항)

• 후원회의 집회 및 광고에 의한 모금의 회수를 평년의 경우 1회에서 각 2회로, 공직선거가 있는 년도의 경우 2회에서 각 3회로 확대하되, 공직선

거의 선거기간중에는 1회에 한하도록 함(제6조의4 제2항)

• '정액영수증' 제도를 신설하여, ▲지구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후원회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정치자금에 관한 정액 영수증을 사용하여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액영수증의 발급절차는, 후원회가 정액영수증에 기재할 기부금의 금액과 발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발행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액영수증'에 기부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문언, 정액영수증의 사용기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후원회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발행인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과 그 직인을 날인(또는 인쇄)하여 신청후원회에 발급하도록 하며, ▲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5만원, 10만원, 50만원의 3종으로 하고, 하나의 후원회가 1년간 신청하여 발급받는 정액 영수증의 액면금액 총계는 그 후원회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정액영수증의 사용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당해년도 말일까지로 하고, 위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영수증은 그 기간종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정액영수증은 그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처벌규정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와 후원회 기타 정액영수증의 발행, 사용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제7조 제2항 내지 제8항, 제31조 제2호 및 제3호)

(2)국고보조금의 증액과 배분방법 등 개선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계상금액을 선거권자 총 수에 600원을 곱한 금액에서 8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추가계상하던 것을 800원씩을 추가계상하도록 하되 지방선거를 동시선거하는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추가계상하도록 함(제17조)

•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 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면 국고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배분, 지급하도록 함(제18조 제2항 제3호)

7. 지방자치법(개정)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여 지방자치제를 완성하고,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1)도농복합 형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설치(행정구역개편)

• 농촌지역 지방자치 단체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에 상공업을 유치하며, 환경, 교통 등 현대행정의 광역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함.

• 현재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또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읍이 있는 농촌지역의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2항)

(2)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주민투표제 도입(제13조의 2)

•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제20조)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제32조)

• 국가위임사무와 시·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제36조 제3항)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강화(제36조 제5항)

• 지방의회의 회기연장(제41조 제2항 및 제3항)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제103조 제4항 및 제5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자의에 의한 국가공무원 정원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가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강화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국가행정의 통일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둠.

• 특별시,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제10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정무직 또는 일반적 국

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함.

• 시·군·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제101조 제4항, 부칙제5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140조의2, 제146조 제2항, 제147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분쟁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직무이행명령(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직무이행명령'을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실시시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위원의 임기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실시시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부칙 제2조-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1995년 6월 27일로 확정)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총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군·구의원의 임기는 1998년 7월 1일 개시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총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함(부칙 제3조, 제4조-1998년부터 국회의원 총선거 후 2년마다 4개의 지방선거가 동시선거로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나. 정치관계법 개혁의 역사적 의미와 그 실현에 대한 전망

○ 정치관계법개혁이 지향하는 목표,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 한마디로, 권위주의 정치시대를 종식하고 진정한 민주정치를 정착시키자는 것

• 소극적으로는, 권위주의 정치시대를 종식시키는 것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민



선거법 자체에서, 금품선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제도 등 "말을 트는"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일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 금품을 받은 자가 지수할 경우의 처벌면제규정, 금품을 준 자나 받은 자에 대한 징기간의 공무담임권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어서 제대로 홍보가 되면 금품선거를 회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

선으로 지방자치를 완성함으로써, 의회주의와 함께 민주정치의 두 기둥의 하나인 지방자치라는 또 하나의 민주정치를 떠받치는 기둥을 세우고,

- 안기부법 개정으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를 막고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으로 정치목적 도청을 금지하여, 한국정치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던 정보정치, 관권정치를 청산하며,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정으로 선거에서의 돈을 최소화하고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으로 정치의 최소비용을 합법적으로 조성하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정치부패를 감시하여, 금품선거와 부패정치를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

- 적극적으로, 진정한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는 것

-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가행정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 정보정치의 자리에 의회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 금품선거가 종식되면 ▲선거가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 국민의 지혜로운 정치적 선택의 장이 되게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장점이 구현되고, ▲정치인의 자질과 행태의 변화를 수반하여 깨끗한 정치, 대안있는 정치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와 정치권의 지도력을 회복하게 되며, ▲나아가 정경유착이 종식되어 경제분야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확보되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더하게 될 것.

○그렇다면, 개혁정치관계법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 개혁정치관계법의 실천은, 당위론적 접근을 하자면 정부, 정치권, 국민이 함께 변화해야 가능.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의 실천의지와 언

론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이며 그 실천에 대하여 낙관적 전망이 가능

- 낙관적 전망의 근거는,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강렬하면 검찰과 경찰이 변화할 것이고, 언론이 시대정신을 고취하면 국민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고, 국민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이를 포착한 정치권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조성되어 있음.

- 개혁정치관계법이 실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선거법의 경우로 예시하여 보면, ▲우리사회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시민사회, 자유사회로 진입하여 자발적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국민의식 전환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이제는 돈이 투표를 좌우하려면 상당한 고액이어야 하고 당락을 좌우하려면 대량으로 살포할 수밖에 없어서 비밀유지가 어렵고 ▲선거법 자체에서, 금품선거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제도 등 "말을 트는"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일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 금품을 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의 처벌면제규정, 금품을 준 자나 받은 자에 대한 장기간의 공무담임권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어서 제대로 홍보가 되면 금품선거를 회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임.

다. 맺는말

개혁정치관계법은, 권위주의적 체제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충격적이거나, 사실은 후진국형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선진국 지향형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우리시대의 2대과제는 통일과 선진국 진입이며, 선진국 진입은 경제도약과 아울러 국가의 중심축인 정치의 개혁없이 성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혁정치관계법의 실천은 시대적 과제이다.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개혁법 활용방안

백영옥 (민족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1. 서론

사회전반의 개혁 분위기 속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정치개혁법안이 지난 3월 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 15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정치개혁법 통과로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대부분 갖추게 되어 일반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치개혁법이 목표로 하는 돈 안쓰는 선거, 경제계에 짐이 되지 않는 정당, 정경유착의 단절, 선거사범의 단속강화, 선거비용의 국고지원의 확대,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사들의 정치관동의 실현가능성으로 정치권이 크게 달라질것 같은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여성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그동안 매우 부진했던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번엔 정치권이라는 「버스」를 타지 못하면 영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된 정치개혁법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선거기간중 금지시킨 것과 지방의원의 월정보수지급등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살

펴보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여성단체들이 할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정치개혁법의 주요내용

가. 법정 선거비용

법정 선거비용을 총선의 경우 1억2천만원에서 5천7백만원로, 시·도지사는 7억2천만원, 시·군·구청장은 5천6백만원, 시·군·구의원은 1천1백만원으로 대폭 낮추었다. 선거비용 초과시 과거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현재는 선거비용의 0.5% 초과시 당선무효까지 가능토록 하는 것은 물론 최고 10년간 공직선거 출마권을 박탈하고 선거법 위반시 직계 존비속과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까지 처벌토록 하는 연좌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과거 형식적이었던 선거비용심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하게 되었다. 법정 선거비용을 지키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거비용 지출은 미리 신고한 금융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했고 선거후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선관위에 보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그 보고서를 3개월간 공개하여 그 보고서를 유권자가 보고 하

자가 있을때는 이익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자금거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껏 여성의 정계진출을 가로막은 장벽 중 하나였던 막중한 자금부담이 덜어지게 되었다. 14대 총선당시 20~30억원의 선거비용을 쓴 후보들이 많았던 현실에서 선거 자금부담은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특히 정치 신인들에게 막중하였으나, 그중에서도 여성후보들의 이러한 정치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정치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후보가 극히 적었다. 이제 선거법이 그대로 지켜지지만 한다면, 과거 보다 많은 여성후보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정치인들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보고로 여성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참신한 후보를 지지하자는 여론이 확산되면 여성들은 정치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치자금

정치자금의 기부한도가 과거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부방법도 과거 기명에서 현재는 무기명정액 영수증(쿠폰제)로 바뀌었다. 국고보조금도 과거 유권자 1인당 6백원에서 현재 8백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쿠폰제인 무기명 영수증제를 새로 도입하여 여당으로만 편중되었던 정치자금 흐름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치자금의 기부과정에서 노출을 꺼려하거나 자금추적등 번거로움에 기피하던 여성들이 자신들이 후원하고자 하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늘려 경제계의 신세를 지지않도록 했고 야당의 살림살이도 나아지게 되었으며 국회 교섭 단체의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의 구성을 허용하고, 후원회의 회원수 상한선을 확대하는 등 정치자금 모금기회의 형평

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정당운영비의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군소 정당의 난립을 가져올 수 있으나, 정치자금법의 본래의 입법목적처럼 정당들이 정치자금 조달보다 정책개발등 정당정치의 질적 향상에 노력한다면, 여성의 정당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여러 정당에서 정책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정책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면 여성의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다.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심을 먼저 표방하는 정당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대정당보다는 약소정당들이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녹색당이 환경문제 뿐 아니라 혁신적인 여성정책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거대정당들이 다음선거에 이보다 더 혁신적인 여성정책을 내세워 녹색당을 참패시켰으나, 여기서 얻은 교훈은 각 정당간의 정책대결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다. 선거사법 처벌

과거 정역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10년이상 박탈하고 벌금 1백만원이상인 경우 선거권 피선거권 5년을 박탈하였으나 현재는 불법 부정선거운동적발시 공무담임권 공공선거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선거사법의 선별처리를 막기 위하여 재정신청제도를 신설, 고소·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의 중앙당이 직접 고등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거 선거사무장 행위만 연대책임을 졌으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까지 확대하였다.

그동안 여성들이 각종 선거에 나서기를 꺼려 했던 것은 정치자금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유세장의 난무했던 폭력과 흑색선전등 혼탁한 선거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정치성 집회가 열리는 곳에 선관위직원들이 비디오카메라를 돌리는등 깨끗한 선거 풍토 정착에 노력한다면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쟁처럼 유능한 여성후보들이 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라. 선거운동원 수의 제한

과거 선거운동의 주체가 유급운동원이었으나 현재는 과거 유급선거 운동원수의 10분의 1인 20명으로 제한하여 선거운동의 주체가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즉 유급선거원 20명으로 제한하여 선거운동의 주체가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즉 유급선거원 20명은 동별로 연락책을 두기에도 모자라는 숫자 이기에 자원봉사자의 도움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운동권 출신이 아닌 이상 선거직전에 자원봉사자를 얻는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처럼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특히 여성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물론 과거 선거풍토를 흐려 놓았던 정치꾼들을 위장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선거기간중에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전이나 후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편법을 쓸 수 있으나 위장 자원봉사자의 양심선언이나 타후보들의 감시, 시민들의 고발등 위험부담이 매우 높게 되었다. 유급 선거운동원 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법정 선거비용의 대폭 인화로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지구당에서는 여성을 위한 각종 강좌나 모임이 늘고 있다. 따라서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정치문화의 발전과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선거비용 국고지원 확대

과거에는 선거공보만 국고에서 지원했으나 현재는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제작, 발송, 후보방송연설, 선거벽보, 투개표참관인 수당, 방송연설비용을 국고에서 부담케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비용부담 때문에 정치권에 진입할 수 없었던 여성을 포함한 각 분야의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선거비용이 줄어들어 많은 후보가 난립할 수 있고 95년에는 4개선거가 함께 실시됨으로 후보 차별화에서 여성후보들이 이점을 얻을 수도 있다.

3.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가. 여성 유권자의 의식개혁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이에 불안해진 후보에게 유권자가 금품을 요구해올 경우 후보들이 과감하게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정치 개혁법하에서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정당협의 설문조사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선 국민들의 의식수준 개선과 선거 범칙에 대한 법적제재 강화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법이 약해서 타락 선거를 막지 못한 예보다는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막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과거 선거문화에서 탈피하기도 어렵고 개정된 선거법도 법망을 피할 허점이 많으므로 여성단체들의 대 유권자 의식개혁교육이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나. 선거감시

여성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법에 관한 강의와 올바른 선거감시 활동에 관한 훈련등 여성단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활동을 공명정대하게 추진해야 한다.

다. 내보내고 싶은 후보를 찾는 역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은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들이 당선되어 깨끗한 선진정치를 실현해보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후보자의 발굴에 있다. 과거 타락선거 풍토에서는 명망있는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출을 주저하였고 주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정치개혁법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여성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인의식이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당리당락에 치우치지 않고 여성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성실하고 국민의 복지증진

금년 여성계 중점사업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사회: 이연숙 (본회 회장)

사 회: 박박한 일정에도 아침일찍 모여주신 전국 여성단체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정치 개혁법의 내용과 활용방안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은 올 10월에 있을 전국여성대회의 주제를 걸러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목단(한국부녀복지연합회장): 누구든지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장하지만 그 내면에는 '여성은 안된다'는 잠재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협에서 후보발굴작업과 새로운 선거문화정착에 주력해야겠습니다.

최영희(대한간호협회장): 올 여성대회의 주제는 내년의 통합선거에 맞추어 '유권자의 윤리의식과 여성 혹은 여협의 역할'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애주(본회 소비자보호위원장): 내년에 당장 당적을 문제이므로 정치참여가 좋을 듯 합니다.

사 회: 어제의 주제 강연이 너무 강해서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개혁과 여성' 혹은 '깨끗한 정치, 여성이 말한다' 등도 좋겠습니다.

정연심(본회 부회장): 이제까지 여성단체는 후보로 참여하는 것보다 유권자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

었는데 이제는 후보발굴과 당선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통합선거법의 제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영숙(한국지역여성회장): 어제의 강의 내용은 여성단체를 이끌어 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성대회의 주제는 '능력있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여 정치에 참여시키자'로 모았으면 합니다.

김명자(속초시 여협회장): '지방자치제와 여성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는 어떨까요?

이정자(한국통일여성협의회장): 그동안 선거에 임하는 여성의 자세는 막연했습니다. '여성의 역할' 보다는 여성이 지방자치제의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는 주제가 좋겠습니다. 여성의 많은 출마와 함께 유권자로서의 역할도 부각시켜 공명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UN이 정하는 내년도 '세계○○의 해' 주제와 결부시켜 여성대회 주제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윤수지(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장):

실현에 열의가 있는 사람'등 내보내고 싶은 후보를 발굴하여 출마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깨끗한 경쟁을 한다고 해도 정치권의 질적 향상과 정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여성 의원을 선거를 통해 내보내지 못한 책임을 나누며, 이번 정치개혁법 통과를 계기로 여성의 정치참여 원년으로 삼아 각종 선거에 후보를 발굴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라. 여성 선거자원 봉사자 교육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만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여성들이 나라를, 지역사회를 내대신 맡아줄 후보를 위해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무보수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거자원봉사인력을 여성단체별로 확보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즉,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내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운동」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선거자원 봉사에 관한 지침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마. 각 정당의 여성공천 할당제 추진

정치개혁법안은 정당내부의 문제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각 당이 당헌 당규를 정치개혁법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지 않는한 구태의연한 정치문화(당 수뇌부의 공천권 거래, 전국구제도에 있어서 여당총재의 선심쓰기와 야당의 자금조달로 이용등)를 개혁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 정당의 당헌·당규의 개선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여 각 정당의 여성당원, 여성단체, 여성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각 정당의 여성공천 할당제를 적극 추진해야겠다.

바. 표도 주고 돈도 주는 후원회 결성

후보를 위하여 깨끗한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network를 활용한 후원회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guide제공.

• 여성관계정책 평가 및 대안 제시

여성단체들은 그동안의 각정당의 활동과 각 정치인의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서를 만들어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여성정책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이나 각 후보의 견해를 선거전 서면으로 받아 분석·평가한 뒤 유권자들에게 자료로 제공한다. 이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과거 record(경력, 글, 관련기사등)를 검토하고 둘째, 모호한 태도를 표명했을때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 지역 단위로 현안사항을 제시

4. 결론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정치개혁법의 통과로 정치개혁의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으나, 이 제도를 둘러싼 「성공론」과 「한계론」이 같이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정치개혁법의 허점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상시 선거체제와 사조직의 발호를 거론하는 사람이 많으며, 정사협의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8%가 선거비용 제한으로 당초회, 계모임등 사조직운영이 더 강화되어 정치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조직 운영과 자원봉사자 활용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 여성유권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을 고쳤다고 바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운 정치문화의 정착과 아울러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오늘의 한국여성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성들이 추대하고 싶은 후보를 발굴하고 그 후보를 위해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당선시키는 선거혁명을 목표로 여성단체들이 전력투구를 해야 할 것이다.

몇년전 지방자치 선거에 참여했는데 아무리 유능하고 주위에서 밀어주어도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으면 당선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여성을 선거에 후보로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있지만 탈락된 여성후보는 남성보다 타격이 큼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제도를 없애 그 지방에서 헌신적으로 일할 주민이 당선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협에서는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경애(본회 감사): 어제 백영옥 교수의 강연은 여성지도자가 무슨일을 해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연수에서는 정치분과위원회를 여협에 둔다 했는데 여성당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여성당에서 후보발굴, 정치자금지원 등을 맡는다면 우리도 스웨덴처럼 여성국회의원이 40% 이상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박영혜(본회 부회장):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는 13명의 여성이 출마했다가 모두 낙선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의견수렴과정이 미약했고, 한번 밀어주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정당에 여성후보 추천을 유도하고 둘째, 여성인재를 개발하며 셋째 여성후보의 선거자원운

동원의 교육을 여성단체가 직접 실시하고 넷째 유권자 의식교육을 철저히 시켜 여성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여성이 주역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이옥기(본회 부회장):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여성이 공천받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번 여성대회에서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자신이 속한 단체에 가서 여성지도자들이 직접 훈련시켜야 하겠습니다.

한정자(중앙부인회 이사): 올해를 '여성의 정치 의식 발전의 해'로 정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훈련하고 감시요원 교육등을 여성단체가 주도함으로써 이제는 여성의 발전적 의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선거풍토 정착을 위한 감시위원회를 두어 홍보하고 교육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박애주: 전체적인 타이틀의 방향은 정해졌으니, 이제 소주제를 정하여 행동하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이원묘(대한영양사회 부회장): 앞에서 말씀하신 정치위원회나 여성당을 만드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가 미약한 현실정에서는 이를 현실화시키고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정당에 여성정책을 받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본회 근로여성위원): 여협에 정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체에도 위원회 하부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직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단체나 지방여협을 교육해야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성정치참여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논의와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재순(원주시 여협회장): 저는 실력은 없지만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해 보았으나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이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역별로 파트를 나누어 교육을 시키면서 전국적으로 불을 일으키면 결국에는 여성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회: 이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어떻게 실현성을 가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여협은 나름대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후보초청 간담회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움직일만한 주제를 가지고 공약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로서 여성의 힘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선거법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여성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여성이 당선되는 가능성보다 여성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남성을 뽑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자: 올해는 여성단체연합과 여성유권자연맹등 타여성단체에서도 지방의회 의석 20% 확보를 위해 여성후보자 발굴과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선거법 실시 첫해에 여협도 뛰어들어 기선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성에 20%의석을 준다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만큼의 인재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좋아하는 후보를 내지 않고 남성이 좋아하는 후보를 추천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여협이 지방여협과 연계하여 여성인재를 찾는데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 회: 저는 무엇보다도 통합선거법이 정착화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연과 유권자연맹, 여협의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는 깨끗한 정치 실현에 중점을 두어 어떤 사람이 나가야 여성정책이 반영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고 방식이 바뀌어진 선거법에 의해서 대개혁하지 않으면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어렵습니다.

정연심: 기반을 닦는 일은 해도해도 끝이 없습니다. 저도 여약사회를 이끌었지만, 남성에게 여성의 권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같은 주제로 같은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여성이 직접 참여하여 이번 기회에 여성당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확인하고 주제위원회에서 논의합시다.

박영혜: 여성의 정치참여 의지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테마가 설정됐으니, 여성정당을 만들건 통합선거법 정착에 목적을 두건 간에 여협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각 회원 단체에서도 위원회를 조직하여 타 여성단체와의 연대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당을 통한 로비와 선거와 관련된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도 여협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옥기: 국회에는 소수의 여성이 있지만 지방자치 시대에는 많은 여성이 참여해야 규모있는 살림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로 이시간부터 열사람의 장점을 키워주고 살려주는 지도자가 됩시다.

사 회: 여러분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국여성대회 주제위원회에 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제를 뽑아 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품권 제도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발행등록 관서에 등록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약관 내용을 살펴본 후 구매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할인판매가 되는 상품권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1. 상품권 허용 배경

상품권 발행금지 조치 이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소비자 양측의 필요에 따라 상품권이 관행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양성화가 불가피했고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제활력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다.

2. 상품권의 기능

〈순기능〉

○ 소비자는 구매시기 및 구매물품의 선택이 가능

○ 발행자는 물류비용절감 및 계획생산이 가능하여 기업의 효율화 및 경영합리화에 기여
○ 설날, 추석 등에 집중되는 물품의 구매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역기능〉

○ 과소비 조장 우려
○ 뇌물공여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
○ 위·변조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 변칙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 가능성

3. 상품권의 특징

① 보증금 공탁제도

발행자가 부도등으로 상품권을 물품으로 교환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품권 소지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액의 일정비율을 법원에 공탁 또는 금융기관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보증금 공탁제도로, 상품권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탁제도 이외에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함.

② 상품권의 현금환불

상품권의 물품보관증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금과 상환되지 않음

-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그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 기재된 금액을 8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음

③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두지 않은 것이 원칙적이거나(이 경우 5년)유효기간을 두는 경우 반드시 1년이상(농·수·축산물등 장기보관시 변질이 우려되는 경우 3개월이상).

단,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전까지는 7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상환받을 수 있음

④ 종류별 할인판매기간 중 사용방법

금액상품권의 경우 할인가격을 적용하여 구매 가능함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할인판매 기간 중에 혜택을 볼 수 없으나 법령에서는 상품권 권면에 할인혜택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음

⑤ 상품권 판매장소

상품권 판매장소는 발행자의 물품판매 장소로 제한되어 있음

- 사채시장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위·변조등 불법 상품권일 가능성이 큼

⑥ 상품권 할인판매

상품권 할인판매는 제한할 계획임

-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는 위·변조등 불법상품권이거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변칙적인 자금조달 목적으로 사채업자에게 대량으로 할인판매한 경우이므로 위험성이 큼

4. 소비자 숙지사항

법으로 소비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시 많은 주의를 요함.

- 상품권 발행등록 관서에 등록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 약관 내용을 살펴본 후 구매할 필요가 있으며
- 과도한 할인판매가 되는 상품권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

또한 상품권 발행자가 법에 보장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위반할 경우,

- 인가·등록취소, 발행정지, 벌금 또는 징역등의 행정·사법적 제재가 가능하므로

- 법규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상품권 발행 등록 관서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여성의 출산권리와 출산건강 확보가 회의의 초점

이정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여성·인구·발전 회의 워크숍에서 가장 초점이 된 것은 여성의 출산권리와 출산건강 확보였다. 여성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충분히 유지하는 상태에서 태울과 자녀수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사회의 지원체제가 있어야 한다.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방콕 유엔센터에서 UNFPA(유엔인구활동기금)가 주최한 <여성·인구·발전 관련 동남·동아시아 여성단체 지역회의>가 있었다.

12개국에서 모인 28명중에 대한가족계획협회측으로 부회장인 김모임교수와 여협측으로 이사인 내가 포함되었다.

이 회의는 인구문제에 대한 여성단체의 이해증진과 UNFPA에 대한 인식제고, 특히 상호의견교환과 워크숍을 통해 올 9월에 카이로에서 있을 <인구와 발전 국제회의>에 제출할 건의문을 마련하는 4개의 지역별 사전회의중의 하나였으며 실현성있는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유엔관련기구 등에서 24명이 참가하여 거들었다.

UNFPA대표 Mr. Denis J. Halliday 씨는 환영사에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동반자가 되지 않는 한 지탱가능한 발전이란 허황된 목표가 될 뿐이라고 전제하고, 전세계가 교육, 보건, 취업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세력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회의에서 특히 여성의 출산권의 역할과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한 많은 제안이 나와주기를 희망했다.

주제강연을 한 Thanpuying Sumalee 범태평양 및 동남아 여성연합회장은 지난 10년간 이룩한 기술발전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의해 가족계획·출산건강·출산권리·여성의 세력화와 같은 인구 및 발전 과제에 있어서도 새도전을 맞게 되었으며 여성과 여성단체가 주력해왔던 인구사업을 근년에 정부가 전담함으로써 여성단체는 인구사업에서 멀어지게되자 인구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따라서 여성단체가 인구사업의 중심역할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여성단체를 거의 찾아볼수 없는 현실이다.

Cheng Yin Moor(말레이시아, 가족계획협회 사무총장)은 여성의 출산건강에 대해 발제했다. 그녀는 출산건강이란 인류발전의 씨로 안전한 모성, 불안정한 낙태, 가족계획, 미성년임신, 강간매춘, 불임, 에이즈감염, 성관계에서의 남녀평등권, 정신건강, 암등을 모두 주제로 담고있다.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고 질병의 걱정없이 성관계를 가질 선택권이 있어야하며 모든 외상, 무지로부터 생기는 고통, 부적합 서비스와 보호로부터 안전해야한다.

지구상의 3억부부가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쓰지 못하고 또다른 3억의 여성은 아이를 원하지 않으나 피임을 안하고 있으며 초산의 23%가 20세이하에서 일어난다.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는 약한 체력, 콘돔사용 설득실패가 계속 문제로 되고 있다. 출산건강은 여성의 권리이며 출산건강의 필요성은 인간적 일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출산역할, 생산적 가치 측면에서 본 여성에 대한 인식은 현대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인구문제는 가족계획의 차원을 넘어서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건강, 지위에 관한 문제 등 여성의 요구를 끌어내어 발전과정에 주류로 참여케하기 위해서는 여성민간단체를 인구발전문제와 연계하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성·인구·발전 회의 워크숍에서 가장 초점이 된 것은 여성의 출산권리와 출산건강 확보였다. 여성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충분히 유지하는 상태에서 태울과 자녀수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사회의 지원체제가 있어야 한다.

피임도구, 기술이 사용자측·공급자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실패한 피임자료와 여성콘돔을 포함한 피임도구의 안정성에 대해, 출산결정에 있어 남녀의 역할, 남성피임기구의 개발, 임신과 AIDS등에 대해 더 많은 조사·연구가 정부·민간단체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피임도구 제작자는 여성의 의견과 관점을 참작해서 반응을 하도록 제안했으며 그리고 정부는 삽입기구사용의 엄격한 지침과 정책을 개발해줄 것이 건의됐다. 민간단체들은 여성의 출산건강 유지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

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하고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이 남녀 평등의 시각에서 짜여지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

정부는 피임기구를 이용하기 쉽고 구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도록 보장하고 여아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여아의 유산을 방지하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안전한 성교육에 대한 학교교과를 마련할 뿐 아니라 여아도 국민학교는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최소 18세 이상의 결혼연령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회와 역할의 제고를 주제로한 워크숍에서는 여성의 세력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치·경제·교육분야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반드시 여성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며 정부의 모든 발전계획은 여성중심적으로 조망하고 여성가장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을 사회개발부분에 더 비중을 두어 재구성하도록 건의했다.

이외에도 여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정부·민간·유엔의 역할에 대한 건의와 출산건강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원하지 않는 임신과 AIDS의 최소화를 위한 건의 등이 제출되었다.

이상의 총40개의 건의들은 1994년 9월 카이로에서 있을 인구·발전회의(정부대표)에 제안될 것으로서 모든 프로그램이 여성의 입장에서 조망·조정되며 지탱가능한 사회발전과 여성의 출산권이 바로 인권이라는 대명제하에 재조명될 예정이다. 우리 대표들은 인구문제에 관련한 남성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되므로 남성단체대상의 회의와 워크숍을 많이 개최해줄 것과 남성피임방법을 많이 개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김모임 연세대 간호대학장이 부의장에 선출되어 전체회의를 이끌었다.



나를 위한 일, 매스컴 모니터

송계연 (29세, 서울 연희동 주부)

밥 짓고 빨래하고 아기를 돌보는 것 외에 나를 위한 일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집에서도 그리고 이곳 모니터 회에서도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을 키우려 한다.

그리 넓지 않은 주방 한 편에 웅기 종기 모여 앉은 양념통들. 이른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를 반기건만 오늘은 유난히 밍살맞아 보이는 것이 또 심통스러운 하루가 될 모양이다. 휴! 오늘도 역시……

아침 상 물리기 바쁘게 후다닥 출근하는 그이와 학교 늦을세라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 다니던 막내도련님의 등교가 끝나고 나면 “엄마”하면서 예쁜 소리로 나의 손길을 갈망하는 우리 딸 소영이와의 열전(?)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와는 시간은 왜 그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다시금 저녁상을 차리고 남편을 기다리는 별일 없는 생활이 역시 이어지려는 건가? 심드렁한 기분으로 펼쳐본 신문 한 귀퉁이에 매스컴 모니터 교육이라는 자잘한 안내문이 쓰여있다. 혼잣말로 툭 던진 한마디에 남편은 흔쾌한 반응을 보인다.

“나도 한번 해 볼까?” “그래, 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소영인?” “글쎄” 이내 의기 소침해진 난 신문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열심히 설거지를 해댄다. 그러면서도 자꾸 그 쪽으로 눈길이 가는걸 어찌겠는가. 얼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이들간의 일정인데 모니터 요원에 적합한 자질을 찾아내려는 의도로 계획된 교육이라는 상담내용은 성취욕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좋아, 해보자구.’

교육 첫날, 소영일 제 아빠 출근길에 달려보내고 (위낙 집안사정을 잘 아는 분위기라 가능했다) 들뜬 마음으로 문을 나섰다. 건강한 탓이었을까? 며칠째 심통부리는 꽃샘 장군도 훌훌리는 눈과 매서운 바

람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무언가를 배운다는게 이렇게 설레이는 일이었던가?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 2년이 고작인 사회경험을 기억의 저편에서 끄집어 내어 열심히 메모하고 귀 기울였지만, 자신감만 사그라지고, 이런 저런 활동을 하면서 교육에 참여했다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들은 나를 무척 왜소하게 만들었다. 벌써 몇년을 켜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않았는데 감히 어떤 주관으로 비평의 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내게 과연 기회가 주어질까? 소영인? 여러가지 걱정을 머릿속에 담고 교육참여의 결과를 기다렸다. 조금만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어 결과를 묻는 내 마음은 마치 대입학력고사를 치른 수험생과 맞먹었으리라.

이들간의 교육으로 턱없이 모자란 모니터 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금은 재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내가 해낼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투성이다.

MISSY를 부르짖으며 새롭게 변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의 대열에 나도 못꼴게 뛰 있나 자조하면서도 부족한 지식, 평범한 사고, 안일한 생활태도를 벗어나기란 그리 쉽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는 요즈음의 하루 하루는 조금씩 신명이 난다.

밥 짓고 빨래하고 아기를 돌보는 것 외에 나를 위한 일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거창하게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보다는, 단지 우리집에서도 그리고 이곳 모니터 회에서도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을 키우려 한다.



새로운 설레임

조혜형 (31세, 의정부시 금오동 주부)

잠자던 의식이 깨어나듯, 기쁨과 뭔가 희망찬 나날이 될 것 같은 이 느낌은 아마도 ‘매스컴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레임 때문일 것이다.

그날은, 두터운 겨울옷을 옷장안에 채곡채곡 넣으며 서론하나의 삶도 옷들과 함께 그 틈사이로 감춰지는 것 같은 또 한번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매일 습관처럼 조간신문을 뒤적이다 시선이 멈춘 곳은 가정란 한구석에 실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매스컴모니터 교육에 관한 몇줄의 기사였다.

그것은 항상, 일상의 권태에서 탈출하고픈 바람을 자꾸만 불러오는 배의 무게를 핑계삼아 무너지곤 하던 때에 본 신선한 유혹이었다.

‘매스컴 모니터’에 대해서는 늘 관심과 갈망을 갖고 있었지만 막연하고 무지하던 터라 생각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에 여협의 모니터 교육 참가에 대해서는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3월 24일부터 이틀에 걸친 모니터 교육은 참으로 새롭고 흥분된 시간이었다. 그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생각없이 TV앞에 앉아 있었는가 싶은 부끄러움을 일깨워준 시간이기도 했다.

사무에 바쁜 남편의 늦은 귀가는 혼자서의 시간을 많이 요했고 때문에 저녁시간이 되면 나는 항상 텔레비전의 단골고객이 되어야 했다. 텔레비전이 보여주는대로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울고, 비도덕적이면 분노하고……어느새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던 텔레비전 앞의 수동적인 내 모습이였다.

그러나 매스컴 모니터 교육을 받은 후, TV앞에서의 내 행동은 많이 변해 있었다. 종전 생각없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드라마 한편, 쇼프로 한 편을 보더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인 자세에서 시청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비평과 감시만이 아닌 올바른 감상도 함께 식별력을 가지려 노력을 하고 있다.

TV는 앞으로도 우리 생활과는 분리될 수 없는 대상임은 누구나 인지하는 바이다. 그만큼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사고를 지배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너무나 태연히 받아 들이고 있다. 나 자신도 그런 생활을 보냈지만 앞으로 매스컴 모니터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매스컴으로 물든 오늘의 현실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데 작은 힘이 되고 싶다.

잠자던 의식이 깨어나듯, 기쁨과 뭔가 희망찬 나날이 될 것 같은 이 느낌은 아마도 ‘매스컴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레임 때문일 것이다.

희망과 장애를 함께 안고 있는 각국의 여성

이영님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홍콩, 농촌여성 상속받게 법 개정 움직임

중국과 인접한 홍콩 북부 농경지역 新界에서는 식민통치 이전의 법에 따라 남자들만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이를 고쳐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입법국(의회)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 10명은 최근 보수적인 주민들로부터 폭행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경찰관 20여명의 호위를 받으며 2개 부락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 4백명의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들의 신계방문중 약 2백명의 주민들이 육설을 퍼붓는 등 적대적인 감정을 보였지만 조사는 큰 불상사 없이 끝났다.

앞서 상속법 개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들이 마을을 방문하면 폭력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이보다 앞서 홍콩 입법국 앞에서 벌어진 신계 주민 1천명의 반대시위중 의원 1명이 시위군중으로부터 얻어맞고 발에 채이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고층건물로 가득 찬 홍콩의 도심부와 중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산간지대인 신계지역에서는 영국 식민통치 이전의 전통적인 가족법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신계에 많은 도시가 건설되면서 남성 중심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적 주민들은 현대사회와 같

등을 빚고 있다.

한편 홍콩 입법국이 입법기구가 아닌 "법률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면서 입법국의 법률개정 권한 자체를 부인해온 중국은 상속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 주민들이 분열되고 양국간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홍콩주재 영사관격인 신화통신의 주 유청 부지사는 "상속법 개정안은 오는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부터 발효되는 헌법 뿐 아니라 지난 84년 중국과 영국이 조인한 공동성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 논의가 오는 97년까지 계속될 것이므로 중국과 영국 정부간에 이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르단 홍일점 여성의원 수난

회교국인 요르단 의회 사상 처음이자 단 한 명 밖에 없는 여성의원인 동료의원들과 언론으로부터 전근대적인 성차별을 당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투산 알 파이잘 의원은 최근 정책 토론중 자신의 발언에 불만을 품은 동료 남성의 원으로부터 육설과 함께 채말이가 날아드는 봉변을 당한 뒤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자말 크레이샤 의원을 명예훼손과 폭행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마흔네살로 소수종족인 카르카스족 출신인 파이잘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수도 암만의 한 선거구 대표로 출마해 당

선됨으로써 요르단 사상 여성으로서의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여권 옹호론자이며 한때 TV어나운서로 일하는 등 전통 회교사회에서는 드물게 활발한 사회활동의 이력을 가진 파이잘 의원은 그러나 지난 2월 의회의 정책 토론중 보수파의 자말 크레이샤 의원이 "요르단에는 계엄령과 철권통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가 예기치 못한 변을 만났다.

"민주화가 요르단 사회를 망치고 혼란만 일으킨다"는 크레이샤의원의 발언에 파이잘 의원이 항의하자 크레이샤는 "입 닥치고 꺼지라"고 폭언을 했으며, 파이잘 의원이 이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발언권을 주장하자 크레이샤 의원이 채말이를 집어들어 그녀를 향해 던진 것이다.

다행히 채말이는 빗나가 파이잘 의원의 뒤쪽에 있던 서기가 맞았으나 크레이샤는 파이잘 의원이 대표하는 카르카스족과 그녀의 부모, 그리고 민주주의를 싸잡아 욕설을 퍼부었다.

파이잘 의원은 "크레이샤와 같이 비민주적인 사람은 여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비민주 세력이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배워야 할 것"이라면서 그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크레이샤가 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인데 크레이샤의 면책특권을 박탈해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80명의 의원중 3분의2가 동의해야만 한다.

파이잘 의원은 일부다처제와 남성지배의 전통을 타파하기 위한 여성운동을 주도하고 있어 회교근본주의 세력파도 계속해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전통의상

을 입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은 파이잘이 처음 의원에 출마한 지난 89년 그를 '배교자'라고 비난하면서 법원에 그의 결혼을 무효화하고 그를 살해하는 사람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선거에서 파이잘은 낙선했고 소송은 취하했다.

한편 언론 역시 파이잘의 정계 등장에 극도로 보수적이고 편파적인 시각을 보여 지난해 총선 직후에도 요르단의 신문들은 사상 첫 여성의원인 파이잘을 만화로 그리면서 그녀를 국민의 대표가 아닌 성적 대상, 또는 부업에 머무르는 여성으로 묘사했다.

한 만화는 가슴을 반쯤 드러낸 미니스커트 차림의 파이잘 의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회교전통의상을 건내주려는 회교 근본주의자 의원에게 교태를 부리는 모습으로 묘사했으며, 또 다른 만화는 압둘-살람 알-마잘리 총리가 커피를 마시고 앉아있는 유목민 베두인족의 천막 옆에서 역시 미니스커트를 입은 그녀가 빵을 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만화는 파이잘 의원의 의정활동을 반대하는 회교세력이나 보수파 신문이 아니라 그녀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진보파 주간지들에 실렸다는 점에서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파이잘은 "이런 문제는 나 개인과 의회와 국가에 모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로 진출하려는 요르단 여성들의 기를 꺾어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매우 힘든 일이었다. 나는 여성들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하기 원한다"고 말해 전통 회교사회의 여성 정치인이 겪는 좌

중국과 인접한 홍콩 북부 농경지역 新界에서는 식민통치 이전의 법에 따라 남자들만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이를 고쳐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입법국(의회)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실시될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한
범흑인세력인
아프리카민족회의
(ANC)의
의장이기도 한
만델라는 최근 북부
트란스발 지역에서
선거유세중 "ANC는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남성들에게는 가사를
분담할 것을
촉구했다.

결과 이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함께 나타냈다.

만델라, 남성에 가사분담 촉구

소수 백인지배 국가이면서 흑인사회에서 뿌리깊은 남성중심적 관습이 남아있어 흑인 여성들이 이중의 질곡에 시달리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흑인지도자 넬슨 만델라는 최근 앞으로 흑인이 주도하게 될 새 정부에서는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배정하겠다고 약속,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이달 중 실시될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한 범흑인세력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의장이기도 한 만델라는 최근 북부 트란스발 지역에서 선거유세중 "ANC는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남성들에게는 가사를 분담할 것을 촉구했다.

만델라 의장은 1만5천명의 군중이 모인 집회에서 남자들이 집안일을 해야 하며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해 남성들로부터는 얼얼한 듯한 침묵을, 여성들로부터는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만델라의장은 자신이 백인정부를 전복하려 한 죄로 27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밥짓기와 빨래 등을 스스로 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남자들이 이런 일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하는 한편 이런 일을 할 줄 모르는 남자들은 이를 배우는 강습에 수강신청을 하라고 안내하기까지 했다.

그는 또 ANC가 동일직종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여성들이 남자와 같은 임금을 받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 ANC는 기존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탁아소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탁아소에 자녀를 데리고 오가는 일도 절반은 남자들이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여성학 지상강좌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여성이 되는 의미 (VI)

-남녀 관계-

추애주 (연세대 여성학 강사)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모든 인간관계는 자연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인간 관계속에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하나의 질서가 있다. 이 질서는 그 사회의 이념, 제도, 관습, 문화 등의 구성물이다. 우리사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통적으로 그 뿌리가 확실한 가부장제적 사회이다.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이 우리문화의 토대나 기반을 이룬다. 여기서는 가부장제적 질서에 기반한 남녀관계를 구조적, 개인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 우월성에 기반하고 있는 가부장제도는 여성학에서 항상 문제삼고 있는 인간 억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가부장제 문화가 제공하는 질서가 남녀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여성 삶의 구조인 가족, 성, 일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족 안에서의 남녀 관계이다. 남편, 아내의 관계는 그들이 역할에 의해서 결정된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책임과 아내의 가사노동이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상호 교환되는 자원으로 이해되지만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는 남성이 여성을 통솔하고 지배하며 여성은 복종으로서 대처해야 하는 관계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과의 관계라는 것은 그 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가능한 관계이다. 여성은 외부에 대한 모든일은 남성의 몫으로 넘겨주고, 자식은 오로지 사회생활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위로하고 감싸주며 치료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남녀 차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가정내에서 남녀간의 힘의 불균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기반으로 전환된다. 힘이 불균형된 상태에는 한쪽이 다른쪽에 대한 억압이나 학대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란 수단도 필요하게 되며 또한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쉽다. 실제로 여성이 가정내에서 경험하는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통계에 의하면 46.1%의 여성이 결혼관계내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Elbow에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성향은 일반적으로 지배자형이라고 한다. 그들은 아내가 자신에게 의존하기를 기대하며 자신이 도덕적 안내자로서 아내를 보호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내가 독립적이 되면 두려워하며 위협을 느낀다. 자신이 아내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폭력적이 되며 아내를 학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폭력현상을 일반적으로 남성의 가난과 무지, 낮은 사회적 위치의

여성의 열등성-남성의 지배, 여성의 복종이 만드는 남녀 관계의 개인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H. Goldberg는 가부장제적 남녀 관계를 행동하는 인간과 반응하는 인간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남성이 공격성, 독립심, 성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여성의 생활방식이며 여성적이라는 인식과 가르침은 여성을 철저한 반응적 인간으로 만든다. 이런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배우와 관객의 경우에 비교될 수도 있다. 무대위의 배우가 연기가 서툰다면 관객들은 그 배우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배우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여성도 남성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일이나 소홀한 일이 있으면 남자를 비난하고 남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은 여자야말로 가엾은 희생자이며 무죄라고 생각하게 된다. 반응만 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책임을 져야 할 행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므로 성공만이 최대의 가치가 된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동만 해야 되는 사람은 실패를 할 수가 없다. 그는 성공과 지배만이 그의 역할이 되어야 하므로 실패는 자신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남성이 실패자가 되면, 실패자로서의 남성에 대해 호의적이고 애정을 느끼는 여성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여성은 승리자로서의 남성을 추구하며 남성의 지위,



신분에 감격한다.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남성이 제공할 수 있는 물질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되기가 쉽다. 순종만 하는 여성은 자신의 모든 상황은 남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참된 감정은 숨겨야 하므로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쌓게 된다. 여성들은 축적된 원망과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욕구불만이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신과 의사인 레스터 겔브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데이트 상대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남녀관계의 불평등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남성의 지배, 여성의 순종은 바로 남성의 완전한 책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행, 불행도 남성의 책임이 된다. 여성의 환상적 기대수준과 남성능력의 현실가능한 수준의 차이가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남성이 상대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전통적인 남녀관계에 집착할수록 남성은 악한,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과 관계의 상처의 깊이가 클 수밖에 없다. D. Winter, A. Stuart, D. Maclelland의 남녀관계의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최고의 남성으로 평가 받는 사람 즉 지배와 권력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며 힘에 의존하는 남성들은 의존적이며 순종적인 여성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여기며, 그들이 젊었을 때는 자신의 여성 정복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한 대상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여성은 이분화되어 좋은 여성은 생명의 창조자, 모성, 헌신, 봉사, 사랑, 순결등으로 인간이상으로 미화하여 여성의 인간적 욕구나 욕망을 무시하였다. 한편으로는 남성욕망의 대상으로서만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나쁜여성으로 범주화하여 인간이하로 비하함으로써 여성의 실체는 현실적으로 실종되어 버렸다. 이것이 남녀관계의 역학에 작용하여 그 관계는 허구와 위선의 관계로 전락되었다. 현대의 가부장제사회의 이상적인 남성은 지배적, 야심적, 권력, 출세지향적이며

성적매력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감수성, 예술성도 있고 가정적, 정서적이며 어린이를 사랑하고 따뜻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이상적인 여성은 부드럽고 상냥하며 온순하고 욕심이 없으며 남편과 가정에 충실하며 성적매력이 있어야 하며 싸움을 싫어하며 황홀하리 만큼 아름다워야 하고 연약하며 생명력이 넘치며 헌신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남성에게 의존적이면서 여러가지 가사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며 엄마처럼 속박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엄마처럼 깊이있고 유능한 완벽한 여성이다.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이러한 남성, 여성이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각기 상대방에 대해 갖는 환상은 끝이 없다. 어딘가에는 자기만의 이런 상대가 있을 것이고 그 상대를 발견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되어 가리라고 믿고 있다. 여성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해결을 회피한다. 오로지 여성자신의 상처와 괴로움은 남자 탓으로 돌리고 남자를 비난하고 분노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부장제 문화에서의 여성이다. 남성지배, 여성복종이라는 가부장제적 남녀관계는 남성에게도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남성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간적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수준과 물건제공자의 대상이며 책임과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다. 그리고 관계의 최종적인 힘은 여성에게로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 Hegel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처럼 남성이 항상 행동의 주인공이라는 감각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결국은 여성의 반응에 의존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여성을 계속해서 수동적, 복종적, 의존적, 반응적 인간으로 만들어 종속적 역할만 하게 한다면 여성은 자신이 이용당한다는 느낌과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남성의 경우에도 모든 비난과 책임때문에 끝없는 죄의식에 빠져서 둘의 관계는 치명적이 된다.

가부장제적 남녀관계는 서로의 인간적 성장을

저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파멸시키는 허위와 위선의 관계이다. 어디서나 바탕이 되고 있는 남녀관계의 일정한 유형의 이미지는 양성에게 부정적이므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주요한 문제이다.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임회장 축하차

권영자 (정부제2장관)	금일봉
이운경 (국제존타제26지구 총재)	50만원
이선호 (국제존타남서울클럽 회장)	50만원
김순희 (국제존타서울클럽 감사)	50만원
백남희 (국제존타서울클럽 이사)	50만원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100만원
현순덕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회장)	50만원
김도숙 (국제존타서울클럽 이사)	35만원
이요식 (본회 회계이사)	10만원
박명숙 (국제존타서울클럽 이사)	10만원
한정희 (")	10만원
주성민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회 상근부회장)	10만원

김취복 (중앙부인회 회장)	5만원
김방림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20만원

지도자연수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	금일봉
정주영 회장	739만원

(주)럭키: 물품찬조

크라운제과: "

해태음료: "

여성정책토론회

학산기술장학재단	500만원
----------	-------

운영기금

박영혜 (본회 부회장)	100만원
--------------	-------

정연심 (")	100만원
-----------	-------

이옥기 (")	100만원
-----------	-------

신임위원회 위원 소개

(3년간 본회 활동에 자문을 해줄 각 분과위원을 소개한다)

조직관리위원회

정영숙 위원장

- 1939년 3월 8일생
- 동국대 행정대학원 일반행정학과 졸업
- 현 한국지역여학회 회장

김취복 위원

- 1931년 2월 19일생
- 이화여대 가정학과 졸업
- 현 중앙부인회 회장

윤수자 위원

- 1941년 3월 23일생
-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현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장

은방희 위원

- 1933년 6월 25일생
- 숙명여대 영문학과 졸업
- 현 한국여성문화생활회 회장

장진순 위원

- 1934년 8월 24일생
- 이화여대 졸업
- 본회 조직관리위원
- 현 길병원 사업본부장

정연심 위원

- 1935년 7월 8일생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대한약사회약사학회 회장
- 현 본회 부회장

조동민 위원

- 1927년 4월 14일생
- 성신여자대학교 졸업
- 본회 조직관리위원
- 현 노후문제연구소 소장

주일억 위원

- 1924년 11월 7일생
- 고려대 의대졸업
- 국제여자의사회 회장
- 현 국제존타 한국연합회 회장

기획연구위원회

한말숙 위원장

- 1931년 12월 27일생
- 서울대 언어학과 졸업
- 작가협회 부회장
- 현 대한여학사협회 회장

김기태 위원

- 1957년 3월 15일생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동대학원 졸업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언론학 박사
- 현 서강대, 성심여대 강사
- 현 한국방송개발원 정책연구실장

김선영 위원

- 1937년 2월 21일생
- 이화여대 영양학과 졸업
-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장
- 현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현 대한여학사협회 부회장

김영신 위원

- 1943년 3월 11일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조선일보, 합동통신 기자
- 현 연합통신 문화부 부장

김영자 위원

- 1939년 7월 29일생
-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 이화여대 · 성신여대 강사
- 현 대한여학사협회 부회장
- 현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 자문위원

백정란 위원

- 1939년 1월 2일생
- 성균관대 교육학과 졸업
- B.P.W.한국연맹 회장
- 현 인데코 사장

이경순 위원

- 1944년 8월 20일생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 현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위원
- 현 한국방송비평회 감사

이혜성 위원

- 1939년 8월 31일생
- 서울대 사범대 국어과 졸업
- Univ. of Virginia Counselor Ed. 교육학 박사
-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 현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과장

주성민 위원

- 1944년 3월 3일생
-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 졸업
- 한국지역사회교육후원회 총무
- 현 지역사회교육중앙회 상임부회장

주준희 위원

- 1954년 3월 29일생
- 서울대 외교학과, 동대학원 졸업
- 뉴욕주립대 정치학과 박사
-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소장 직무대행
- 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한정자 위원

- 1944년 9월 8일생
- 서울여대 농촌과학과 졸업
-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육과학과,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졸업
- 이화여대, 덕성여대 여성학 강사
- 현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출판공보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 1948년 12월 29일생
- 연세대 식생활학과 석사
- 연세대 식생활학과 강사
- 현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양과장
- 현 대한영양사회 회장

김효자 위원

- 1932년 5월 10일생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 일본학 석사
- 현 경기대 수원분교 일본과 교수

나미레 위원

- 1946년 3월 29일생
-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 문화방송 TV프로듀서
- 영문월간지 'Korea Today' 편집국장

문현경 위원

- 1952년 7월 11일생
- 미국 피츠버그대학 박사
- 현 한국식품연구소 수석연구원
- 현 대한영양사회 부회장

박금옥 위원

- 1944년 10월 24일생
- 이화여대 국문학과 졸업
- 중앙일보 생활부 부장
- 현 중앙일보 여성부 부장

배동순 위원

- 1933년 7월 23일생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동아방송국 제작국 프로듀서
- 전문직업여성(BPW)서울클럽 회장

신동식 위원

- 1937년 12월 16일생
- 연세대 정외과 졸업
-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현 서울신문사 스포츠서울 편집부 부국장

이경자 위원

- 1947년 8월 1일생
- 고려대 교육학과 졸업
- University of Alberta Audio-Visual 수료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 현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홍정희 위원

- 1945년 6월 4일생
- 서울대 회화과 졸업
- Fulbright Enrichment grant
- 미국 미시간대학 연구
- 개인전 13회

국제관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 1939년 10월 23일생
- 이화여대 및 연세대 대학원 졸업
- 현 이화여대 교수
- 현 대한간호협회 회장

강경화 위원

- 1955년 4월 7일생
- 연세대학교 정법대, 미국 Massachusetts대학교 졸업
- 현 세종대학교 영문과 조교수

김선미 위원

- 1943년 9월 29일생
- 이화여대 영문학과 졸업
- 현 미국공보원 전산실장

김인숙 위원

- 1932년 2월 1일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
- 현 한국우먼스클럽 회장

김인숙 위원

- 1939년 2월 27일생
- 연세대학교 사회학박사
- 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상희 위원

- 1947년 8월 15일생
- 감리교 신학대학원 졸업
- 현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회장

박동은 위원

- 1935년 11월 13일생
- 숙명여대 영문과, 미국 오레곤대학교 대학원 졸업
- 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보희 위원

- 1929년 12월 29일생
- 미국 콜로비아대학교 대학원 졸업
- 현 한국사회정보연구원 대표

박영옥 위원

- 1936년 11월 27일생
- 연세대 화학과 졸업
- Texas Women's University 화학과 석사
- Bethel의 에너지조사실 수석연구원
- 현 USO(United Service Organization) 국제문화 담당

배영희 위원

- 1935년 2월 25일생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USC사회학과 대학원 졸업
- 국제존타 서울클럽 회장

소비자보호연구위원회

박애주 위원장

- 1928년 3월 13일생

-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 숙명여대 이학박사
- 숙명여대 물리학과 교수
- 가톨릭여성연합회 회장
- 현 세계 가톨릭여성연합회 이사

김명자 위원

- 1944년생
- 서울대 화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대학원 화학과 박사
- 현 숙명여대 화학과 교수
- 현 한국과학사학회 부회장

김영중 위원

- 1946년 4월 4일생
- 서울대 약학과 졸업
-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 박사
- 현 서울대 약학과 교수

김용자 위원

- 1946년 4월 13일생
- 건국대 상학과 졸업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박사(소비자경제)
- 현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현 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 자문위원

김익기 위원

- 1950년 7월 15일생
-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 박사
- 현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안기희 위원

- 1939년생
- 단국대 행정학 박사
- 경희대 행정대학원 교수
- 현 민자당 정책3국장

여 · 성 · 계 · 동 · 향

이기춘 위원

- 1942년 11월 11일생
- 서울대 가정학과 졸업
- 서울대 소비자학 박사
- 현 서울대 소비자학학과 교수
- 현 대한가정학회 회장

[illegible]

이정자 위원장

- 1942년 1월 9일생
-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 한국일보기자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현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김령자 위원

- 1941년 12월 5일생
- 연세대 교육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 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 현 한국노동 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의장

김엘림 위원

- 1958년 1월 25일생
-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
- 현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 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자문위원

김영희 위원

- 1939년 11월 27일생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 체신노조 부녀부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청년국장
- 현 노동부 고용조정위원회 위원

김재원 위원

- 1949년 7월 13일생

- 미국 인디애나 대학원 경제학 박사
- 현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

박숙자 위원

- 1952년 11월 17일생
-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사회개발부 연구원
- 현 이화여대, 서울대, 성신여대 시간강사

윤자야 위원

- 1952년 1월 2일생
- 방송통신 대학 행정학과 졸업
- 지방노동위원회 앞선위원
- 현 현대공인노무사 사무소 소장
-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이광택 위원

- 1948년생
- 독일 브레멘 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주임교수
- 현 노사발전 연구원 연구위원
- 현 산업사회연구소 소장

이응영 위원

- 1952년 3월 1일생
- 서독 뉘빙겐 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서울법대, 고대, 외대 강사
- 현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필원 위원

- 1937년 1월 4일생
- 경희대 행정대학원 노사인력관리학과 수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녀복지국장
- 인천지방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
- 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여성직업훈련원장

하위직 여성공무원
근무년수 차면 자동승진

8급과 9급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승진 되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8급의 경우 8년 이상, 9급의 경우 9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승진하도록 했다. 따라서 8급으로 9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6천여명의 공무원들이 7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의 자동승진안은 행정채신위원회가 여성보건원(8급)들의 승진체계가 심각한 것을 시정하는 방안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승진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하위직 여성공무원을 위한 직접적인
구제안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하위직에 많이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8급에 1만4천7백64명, 9급에 1만4천8백61명으로 각
각 전체 8, 9급의 23%, 31.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총무처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산전 후 1년간의 무급휴가를 허용하는 육아휴직제와 청원 무급휴직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육아, 청원무급휴직제는 여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제에 뒤이어 정부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는 것으로 가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 올 연말에 법령이 완비되면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신임총재에
변주선씨 취임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을 이끌 제 18대 신임총재로

변주선(54, 세계연맹 지원재단 세계이사)씨가 취임했다. 변 신임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걸스카우트 세계확장을 통한 조직강화와 여성 전문지도자 양성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변 신임총재는 서울사대 영어과, 연대 보건대학원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림성모병원 부원장직을 맡고 있다.

직장여성 유산을 '위협수위'

직장여성 10명 중 3명이 자연유산율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산업보건) 박정순씨가 최근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여성의 종사 산업과 자연유산>에 따르면 총 임신건수의 15% 정도가 자연유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보다는 직장여성의 유산건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유산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박씨가 의료보험 진료비명세서를 통해 1백 54만여건의 여성진료실적을 대상으로 분석한 후 1백53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토대로 추적 조사한 것. 진료대상 직장여성들을 9개 직장군으로 나누어 자연유산 수진자 수를 통계낸 결과 제조업은 43.3%, 금융업은 16.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20.5%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유산율이 가장 높았다고

철도청 최초의 여성차장 탄생

철도청 90년 역사상 최초로 세명의 여성 차장이 탄생했다. 지난 90년 철도전문대학이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이래 최초의 여성 합격자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김선미(27)씨를 비롯해 박낙원(24)씨와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재직해 온 김은숙(31)

씨가 차장 승진시험에 합격 본격적인 교습을 받고 있다.

철도 차장은 1개월에 15일 정도는 밖에서 잠을 자야 하고 열차 신호, 검표 등 육체적으로 힘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간 남자들의 고유 영역으로 치부됐었다. 이번에 합격한 여성차장들은 남자들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낸다는 각오로 모두 화물차 견습을 지원했다고.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 성차별 구조 강화시켰다”는 내용의 논문 나와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은 성차별을 해결하려는 양성평등적 시각이 결여된 채 기존의 가부장제적 사회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여 여성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저임금 노동에 동원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혜경(피어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씨가 올 2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사회주의 여권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막아정책이나 육아휴직 등의 노동복지정책은 값싼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이며 동시에 노동력 재생산의 장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남성-생산 대 여성-재생산’이라는 이분법적 사회구성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재생산 영역에 한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여성을 생산영역으로 이끌어내려는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또한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은 전통적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가족유치적 정책은 노동력 재생산에 유리하고 전체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북구 홍미영 의원,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홍미영(인천 북구의회)의원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 78년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여성평우회와 한국여성민우회, 지역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여성단체에서 활동했다. 지난 83년에는 지역 주민들과 심리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지역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천의 대표적 빈민지역인 동구 만석동으로 가족 전체가 이주, 본격적인 빈민 운동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만석동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여성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해남여성회>를 결성했다. 또 여성들에게 강요됐던 복강경 수술의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 보사부와 국회의원에 치료대책을 요구하는 등 지역운동의 모델로 평가받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상을 보인 인물.

기상청에 여성서기관 탄생

기상청에 여성서기관(4급)이 탄생했다. 예보관리과의 김혜정(47)이 그 주인공. 67년 덕성여고를 졸업하고 총무처 5급 을류 기상직 시험에 합격하면서 입청한 김 서기관은 예보과, 기후자료 발간, 기상개발실 등 다양한 부서를 섭렵한 기상업무의 베테랑.

“농촌주부 노동시간 늘었다” 농업진흥청 조사

농촌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간은 길고 여가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주로 쌀농사를 짓는 전국의 30개 농가를 대상으로 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촌 주부의 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12시간 58분으로 지난 88년에 비해 14분이 늘어났다는 것.

또 농가주부와 남편의 생활시간 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번기의 경우 주부의 노동시간이 남편보다 1시간2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주부는 노동시간의 64.8%를 농업노동에, 35.2%를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반면 남편은 97.1%를 농업노동에, 2.9%를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 창립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가 지난 3월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다. 정치개발연구소의 김창희(전 민주당 여성특별위원회 여성국장)대표는 기존의 연구소들이 여권성향을 가진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준 것에 반해 야권성향의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교두보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다.

정치개발연구소는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환경, 교육, 여성정치, 통일, 노동 등 6개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활동 계획에 따라 세미나와 연수회 등을 열어 나갈 방침이다.

내년 YWCA 세계대회 준비로 분주

대한YWCA연합회는 내년 세계대회를 앞두고 한국YWCA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전 국회의원이자 YWCA실행위원인 김현자 씨를, 실무조정관에 강교자 실행위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 김영정 실행위원(전 정무제2장관)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IWS(International Women's Summit)의 준비회의 참석차 지난 3월 초 스위스 제네바 카티니에 다녀오는 등 대한YWCA의 실행위원들이 각종 세계회의 준비차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

이우정의원, 광주지역 여성지도자 간담회 참석

민주당의 이우정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광주지역에서 개최된 여성지도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 의회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전남 여성문제 특별위원회와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광주지역 여성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상담실 운영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 등 가사분쟁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가사상담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도는 하루평균 11~20건 정도로 낮은 편이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두달간 상담실적에 따르면 이혼관련 신상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내용은 성격차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문제, 혼수관련 갈등, 폭행문제 등이었다.

<가사상담실>이용은 서초동 가정법원 종합상담실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신청을 하면 상담날짜와 시간을 약속받을 수 있다.

성폭력법 예산 문제로 골머리

지난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법) 중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둘러싸고 보사부와 경제기획원이 밀고 당기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의 경제지원 부분.

성폭력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경비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성폭력 피해자는 경제적 무능력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해 보사부는 "중앙정부가 50%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지원하자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대협,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이효재 공동대표는 지난 3월24일 김영삼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아시아 각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이행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처리 해결없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한다고 다시한번 강조.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결성

23년동안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살해한 이순심씨 1차 재판이 지난 3월22일 수원지방법원 201호실에서 속개된 것과 함께해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이 결성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를 비롯해 수원시 카톨릭여성연합회를 비롯한 수원지역의 1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청인단은 공동변호인단(고재성, 김철균, 배금자, 이종걸 외 4명)과 함께 이순심씨 무죄석방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허명화 서초구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발간

서초구 구의원으로 활동중인 허명화 구의원(서초구 반포3동)이 최근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보고서>를 펴냈다. 허 의원은 지난 일년간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감안,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의정의 합리적 편성과 결산심사에 주력해 왔다.

손봉숙 소장, 베트남여성연맹 초청으로 하노이 방문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손봉숙 소장은 지난 3월30일 베트남여성연맹의 초청으로 <여성정치연구센터> 설립을 자문하기 위해 하노이를 방문했다. 손 소장은 "개방을 시작한 베트남의 여성문제를 연구하고 지식을 교환하는 일은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내의 여성문제와 문화적 이질감 문제를 예측하는 한편 해결책을 마련해보는 기회였다"고 귀국 후 밝혔다.

여연 및 여노협, "근로여성복지계획" 삽입내용 제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이 지난 4월5일 다음달까지 마련해야 하는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의 세부추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이들은 '근로여성 기본계획 세부추진 계획에 관한 제안서'에서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에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현장에서 실제로 시행토록 고용구조개선, 여성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 등 정책기조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교육, 유아교육, 사회교육 과정에 남녀평등이념 포함, 고용차별제도 개선, 정부와 공공부문의 여성할당제 시행 및 적극적인 여성채용, 승진, 직업훈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 정립, 현저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여성우대조치 등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정치개혁법, 여성정치 활성화 시킬 터

최근 개정된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정치개혁법은 돈을 덜 쓰면서 정책대결로 선거전을 치를 수 있게 유도하고 있어 여성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각 여성단체의 준비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치연맹(총재 김정례)이 지난 4월12일 오후 2시 서울YWCA강당에서 개최한 정치개혁법 강연회에서는 지금껏 여성들이 정치에 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금문제였는데 달라진 선거법은 선거비용 공영제 확대, 쿠폰제 실시를 명시하고 있어 금권에 좌우되던 선거분위기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강연회에서 주제강연을 한 이남영(숙명여대 정의과)교수는 "지방의회 같은 작은 단위에서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활발히 접촉하며 활동해온 여성들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며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새로 개정된 정치개혁법이 과거의 정치관계법같이 사문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법 집행방식에 있어서도 불평부당의 입장을 견지

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예방, 감시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황금희 (여성신문 기자)

'독자의 소리' 신설

월간 「여성」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그달그달의 활동내용과 회원단체의 소식 및 국내외 여성계의 소식등을 전하고 또한 여성문제 및 여성들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입니다.

따라서 「여성」을 애독하시는 일반독자 여러분들이 그간 여러 통로를 통해 읽으신 소감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독자의 소리'란을 신설해 독자의 요구사항과 소감을 활자화하고 「여성」의 편집에 확실한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보내주실 곳 : 용인구 한강로3가 40-42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출판공보부
- 전화 : 794-4560 796-4560
- FAX : 796-4995

전국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본회의 '전국여성단체지도자 연수'가 100여명의 여성단체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설악산 현대설악콘도에서 지난 4월12일과 13일에 걸쳐 개최됐다.

회원단체 및 시도여협 임원, 본회 임원, 위원, 관련기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에서는 개회식에서 권영자 정무제2장관의 축사가 있었으며 '정치개혁법 개정내용과 의의'에 대한 박상천 민주당 국회의원의 강연과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개혁법 활용방안'에 대한 백영옥 정치학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을 통해 정치개혁법 통과로 여성의 정치참

여를 확대하고 정치세력화를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여성과,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 친목을 다지는 유대강화의 시간을 갖고 흥겨운 한마당을 펼쳤다.

이튿날에는 여성단체의 활동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거쳐 앞으로의 중점사업에 대한 여성계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1박2일간의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를 끝마쳤다.

우천관계로 개회식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참가자들이 일사분란하게 협조하여 계획된 프로그램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

하여,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시험하는 유쾌한 장이 되었다. 또한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격려전보와 금일봉, 비행기 곁항에도 불구하고 우중을 무릅쓰고 달려와 준 권영자 정무제2장관, 그리고 강원도지사 및 속초시 여협, 고성군 여협등의 따뜻한 환대로 즐거움이 배가된 행사가 되었다.

각분과 위원회 구성 마쳐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자문기구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새 구성에 들어가 지난 4월초 작업을 끝마쳤다.

조직관리위원회, 기획연구위원회, 출판공보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 소비자보호연구위원회, 근로여성위원회 등의 위원장 선임이 있은 뒤 진행된 위원 구성에서 본회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인물을 대거 참여시켜 위원회의 분위기를 일신시켰다.

위원회 구성이 끝난뒤 곧바로 각 위원회별로 첫 회의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보사부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



본회는 지난 3월29일 서울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서상목 보사부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원단체장 및 타여성단체장, 정계·학계 여성계 인사등 100여명의 여성지도자들로 성황을 이룬 이날 아침 간담회장에서는 서보사부장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그동안 경제발전 우선정책에 밀려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연금으로 조성된 8조원 기금의 3분의 1가량을 여성복지비 및 노인시설 투자비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의 기초연설이 끝난뒤 들어간 질의응답에서는 성폭력 관련법 시행에 따른 예산문제, 직장탁아소 확대방안, 보사부 산하위원회에의 여성참여도 등 참석자들의 여성의 권익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답변에서 서장관은 "특별히 만든 성폭력관련법이 예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현재 여성근로자 5백명 이상으로 돼있는 직장탁아소 설치의무규정을 3백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재정지원등을 통해 직장탁아소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다" "여성위원 비율이 너무 낮은 현실을 개선해 앞으로 여

성 전문인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등 여성들의 의견을 앞으로의 여성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매스컴모니터 교육

본회는 지난 3월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매스컴모니터 교육을 본회 2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80여명의 신규모니터들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첫날 매스컴모니터링 필요성 및 모니터 역할(최창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여성과 매스미디어(이경자 한국여성개발원 정보자료실장), TV드라마 특성과 제작구조(정인 MBC TV 제작국 PD)에 대한 강의에 이어 둘째날의 매스컴모니터링 실습으로 이어졌다.

이번 교육은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이 교육후 본회 매스컴모니터로 활동하게 되며 월례회에서 재교육이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로 명칭 변경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부설 한국조리기능훈련원의 명칭이 노동부 직업훈련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로 변경되었다.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는 한국요리와 서양요리 전문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리이론과 조리실기교육을 병행하며 전문조리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조리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일반인들의 상담을 바란다.

(문의전화) 02-833-1624, 845-7925

임원 개선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는 지난 2월 94년도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하였다.

새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두임원 모두 상근임원으로 그간 본회가 식생활개선 계몽활동을 전개해오는데 기여한 공이 크며 특히 조리사 양성 교육 경험이 많은 분이다.

○부회장: 안승춘씨(49세)

안승춘 부회장은 본회 창립 당시부터 조리강사로

재직해왔으며 1982년부터는 이사를 지냈다.

○이사: 박경신씨(42세)

박경신 이사는 1976년부터 본회 계몽교육부 조리연구원으로 재직해왔으며 1991년부터는 조리강사를 지냈다.

중앙부인회

회관 준공식 및 “중앙어린이집”개원

중앙부인회에서는 지난 1월20일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준공식을 각계의 축하를 받으며 성황리에 가진 바 있다.

연면적 877.05㎡에 세워진 지하1층 지상6층의 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더욱 적극적인 도움을 마련하고자 탁아방(중앙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어린이집은 여성건축가협회에서 3년여에 걸쳐서 연구한 “탁아시설의 확대방안과 건축설계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팀에 의하여 설계되었고, 그 연구내용을 적용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다.

이 어린이집은 국내 유일의 24시간 탁아제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며, 소아과, 내과, 한방의 간호사들이



안승춘 부회장



박경신 이사

연계되어 정규검진을 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아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줄 것이다.

또한 방과후 아동 지도관을 개설하여 학교에서 하교한 어린이들을 종합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맞벌이 부부들을 위하여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팜플렛·달력 우송

절제회는 4월 11일 전국 금주·금연·마약퇴치를 위한 절제캠페인을 개최하기에 앞서 전국 51지회, 해외 10지회, 햇볕회 등지에 팜플렛(6만매)을 보냈으며, 또한 호주지회 결성을 위하여 70년사, 팜플렛, 달력 등 자료를 보냈다.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한·일여성 자매결연대회

지난 3월 11일 세계평화여성연합이 주최하고 본 국제승공연합이 후원하는 가운데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한·일여성 자매결연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한·일 양국 여성들을 자매결연으로 맺어 가장 가깝고도 멀었던 두나라 국민사이에 심정적 이해를 이루고 국제화시대의 동반자로서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세계평화실현의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5월 19일까지 22차에 걸쳐 20만명 이상의 한·일여성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질 예정이다.

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었던 지난날을 용서하면서 감격의 눈

물을 흘렸고 이러한 분위기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조되어갔다.

앞으로 이들은 두나라의 화합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심이 되어 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지구촌을 한 가족으로 묶는 튼튼한 고리의 역할도 해나갈 것이다.

이 행사는 민간외교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룬다는데 대해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지도자 세미나 개최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는 지난 3월 21일 40여명의 임원단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인 여성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문상회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성공적인 여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야 하며 아름다운 여성이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제자리)에 있는 것이요,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되는 모습을 지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등-에서 할 일을 다하며 그 속에서 소외되거나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고 하나되는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자신, 가정, 본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여성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 안내

'95년에 개최될 제4차 북경대회는 '85년 나이로비 대회 이후 10년만에 다시 그동안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었나를 전 세계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동시에 21세기의 여성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대회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가 '95년 9월 14일~15일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UN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제1차 세계여성대회를 멕시코에서 개최한 이후, 제2차 대회를 1980년에 코펜하겐에서, 제3차 대회를 1985년에 나이로비에서 개최하였다. 따라서 '95년에 개최될 제4차 북경대회는 '85년 나이로비 대회 이후 10년만에 다시 그동안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었나를 전 세계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동시에 21세기의 여성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대회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 대표들이 참가하는 세계여성대회와 함께,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NGO Forum이 이보다 조금 앞선 8월 30일부터 시작되어 9월 8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NGO Forum에서는 민간단체의 시각에서 보는 여성문제에 대한 분석과 전략이 제시되고,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제안들이 문서로 채택될 것이다. 또한 여성단체들이 개별로, 혹은 연합으로 혹은 다른 나라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각종 workshop과 symposium이 개최된다.

국내 여성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 포럼(NGO Forum)에의 참가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참가승인신청 마감일: 1995년 1월 13일

- 신청서 보낼곳: NGO Accreditation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Two UN Plaza, Room 1204

New York, NY 10017

U.S.A.

Tel: (212)963-3140

FAX: (212)963-3463

- 참가승인을 받은 후 참가할 수 있는 회의:

제3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1995.3.13~24)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9.4~15)

비정부기구 포럼(1995.8.30~9.8)

*세계여성회의(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1995.9.4~15; 중국 북경: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비정부기구 포럼 '95(NGO Forum '95)

1995.8.30~9.8; 중국 북경: Beijing Workers' Sports Service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	에	회	장	김	경	오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584-1426
회			장	이	연	숙	양천구 신정동 옥동 신시가지아파트 801-1504	649-5353
부		회	장	박	영	혜	서초구 반포4동 81-5	599-1942
부		회	장	정	연	심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B-909	783-2924
부		회	장	이	옥	기	대구시 북구 노원2가 313-12	053-32-4472
서	기	이	사	최	회	순	중구 을지로3가 지하상가 3구역 근하사 학국(11호)	272-4986
서	기	이	사	강	인	자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1012-401	503-4691
회	계	이	사	이	요	식	도봉구 수유5동 510-20	352-8607
회	계	이	사	양	은	숙	강남구 대치4동 910-6 현대빌라 101호	356-0070
감			사	김	옥	환	인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협성원	032-503-3493
감			사	김	경	애	종로구 관철동 260 세브미용실	732-9585
조	직	관	리	위	원	숙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한신아파트 124-701	0342-702-3078
기	회	연	구	위	원	숙	서대문구 북어천동 1-316	362-3687
재	정	위	원	장	현	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16-1002	0342-701-1436
출	판	공	보	위	원	경	강남구 도곡동 6-17	569-0110
국	제	관	계	위	원	회	서대문구 대현동 11-1	648-2002
사	무	총	장	김	금	래	노원구 중계동 4블럭 신동아아파트 115동 603호	934-7866

회 원 단 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중구 방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여귀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한여학사협회	한말숙	도봉구 쌍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선협회	이옥기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중구 북정동 18 대학문화원 304호	273-7645
중앙부인회	김취복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정정순	중구 명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박영혜	강남구 입구정동 408 미성유치원 208호	516-9608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안옥단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국여성학공협회	정숙자	중구 불매동 1가 132-5	755-5341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하종순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자수협회	김태숙	성동구 종로4동 64-30 24동1번	457-7961
한국우먼스클럽	김인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방희	서대문구 효자동 265-90	303-2112
국제존타한국연합회	주일억	종로구 세부동 90	737-1412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옥자	종로구 평창동 537-9	379-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국순덕	서초구 서초동 1161-2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협회	이예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3번지 2.3호 백제약국4층	631-6006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련	종로구 청진동 286	733-4983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현순덕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미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회	서은경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704호	842-4334
국제송공연합전국여성회	문상희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통일여성안보회	김숙자	용산구 한남동 73-37 한남빌딩 601호	662-3742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숙향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회	이정자	용산구 한강로 3가 40-316	790-5200
한국특약여군회	정영숙	성동구 군자동 327-5 삼호오피스텔 412호	214-2990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유수자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편집후기

각 분과별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지어졌다. 그분들의 화려한 경력에 걸맞게 그분야의 전문성과 고유의 철학을 가진 분들을, 우리 여협의 위원으로 모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기쁨이다.

특히 출판공보위원들의 의욕과 능력에 힘입어 조만간 「여성」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것 같아 기쁘다.

월간여성 • 1994년 4월호 통권317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연숙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식·편집: 한라기획
발행일자: 1994년 4월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서은경
위원: 김효자/나미례/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권수현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YANG'S 生泉과 루이보스티는 제3의기능성식품



YANG'S 生泉

驚異의 건강음료 YANG'S 生泉

흙속에서 찾아낸 「851균」
그 효능은 쇠약해진 신체기능을 활성화하고 신비의 메카니즘이 살아 숨쉬는 경이의 건강음료 「YANG'S 生泉」, 콩단백,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레시틴, 사포니 핵산, 올리고당, 필수 지방산 성분들이 몸에 흡수되기 좋게 「바이오 분해」된 제3의 기능성 식품입니다.

기능성식품이란 영양과 의약을 합친 식품입니다.

未來의 食品을 開發하는
三養食品(株)
건강사업부 TEL. 737-8614



SOD는 루이보스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체를 노화시키는 유해산소를 제거시키는 것은 SOD 뿐입니다. 루이보스티는 물에 해로운 카페인이 전혀 없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건강과 미용의 新물결인 SOD가 최대로 많이 함유된 건강仙茶입니다.

SOD란 피부와 몸을 젊게 하고 각종 성인병을 막아주는 유해산소 제거효소입니다. 21세기는 영양과 맛과 醫藥을 합친 제3의 기능성 식품시대, 이제 인간의 수명은 120세까지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제2의 볼로초 루이보스티와 함께 21세기를 준비하십시오.



유통기한 확인으로 가족건강 나라건강